

설계 · 용역사도 BTL '올인'

그동안 임대형 민자사업(BTL:Build Transfer Lease)에 대해 다소 미온적인 자세를 보였던 설계 · 엔지니어링 업계가 최근 들어서는 적극적인 BTL 용역시장 공약에 나서고 있다.

2006년 2월 12일 설계 · 엔지니어링 등 용역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임대형 민자사업이 크게 증가해 새로운 용역시장이 됐고 많은 용역사들이 BTL팀등 전담부서를 꾸려 신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업계는 “종전까지 재정으로 추진되던 사업들이 올해부터 대거 임대형 민자방식으로 전환돼 지자체 등 관급용역 물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많은 업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수백여 건의 학교시설 설계용역이 모두 BTL로 전환됐고, 규모가 큰 일반철도와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도 공공발주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건의 하수관거 BTL사업에만 참여했던 평화엔지니어링은 최근 SOC사업부에 상하수도 사업팀을 새로 구성, 임대형 민자방식

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남원건설엔지니어링도 지난해 2~3건의 BTL 용역을 수행했던 경험을 살려 올해도 더욱 적극적으로 BTL용역사업에 임할 방침이다.

한광두 남원엔 기획실장은 “이미 지난해 초 BTL 등을 전담하는 민자사업부를 꾸려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를 통해 올해도 더욱 많은 BTL용역을 수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주)삼안과 도명기술공사, 한국종합엔지니어링 등은 지역별 하수관거 BTL을, 무영 및 명승건축 등은 군인아파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건설업체들과 짝을 이뤄 사업참여를 준비하고 있다.

또 올 BTL시장의 최대 화두로 등장한 일반철도 BTL사업도 RTB코리아와 동림건설턴트 등 많은 엔지니어사들이 설계용역에 착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 건축사사무소 대표는 “BTL시장이 정착단계에 접어들에 따라 앞으로는 설계력이 수주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많은 업체가 전략사업을 선정해 설계용역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원가관리 고삐 죄다

건설업계가 원가관리의 고삐를 죄고 있다.

최저가낙찰제 확대 등 지속적인 원가율상승으로, 자원의 선택과 지중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경영의 급선무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진흥기업은 최근 전국 현장소장 회의를 갖고 각 현장별로 지난해보다 평균 2% 수준으로 실행률을 낮추고 현장별로 이 기준에 맞춰 원가 절감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설계변경을 통한 원가절감에 주력해 설계변경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진흥기업 관계자는 “꾸준한 원가절감 노력으로 외주부문에서는 원가절감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올해는 설계변경부문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면서 “설계변경 사유가 있는 데도 발주처와의 관계를 감안해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현장소장들에게 당부했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의 외형성장에 주력해 온 GS건설도 올해 경영방침의 최우선을 ‘비용집행의 효율성 제고’로 잡았다.

GS건설은 본사의 공무 · 구매 · 예산 등 관련부서와 현장 간의 유기적인 협업 관계를 통해 외주비를 절감하고 구매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원가구조 개선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기로 했다.

GS건설은 또 두 달에 한 번씩 사업본부장 주재의 현장소장 회의를 열어 현장의 원가관리시스템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한 관계자는 “경쟁사에 비해 떨어지는 이익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 원가관리에 중점을 뒀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사업관리시스템(PMS)을 원가관리까지 확대해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매년 원가관리를 역점 시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대건설은 고유 조직구조인 현장원가관리자에게 지속적으로 힘을 실어 주기로 했다.

현대건설은 각 현장별로 본사 공사관리부 소속 과 · 부장급의 원가관리자를 두고 있으며 이들은 현장별로 원가관리상황을 점검해 매월 정기적으로 본사에 보고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장원가관리자는 현대건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조직구조”라면서 “회계나 경리 등의 지원업무는 현장소속의 공무부서에서 맡고 원가관리자는 원가관리 지원업무만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산산업개발도 발주제도의 개선과 새로운 구매기법의 개발을 통해 외주구매원가를 최소화하면서 원가절감을 위한 신공법 · 신기술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원가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올해 들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면서 “이는 각 업체별로 현재 시공 중인 공사들의 평균 실행률이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건설업체들이 2000년 초까지 수주한 공사만 해도 수익성이 괜찮았다”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수익성이 괜찮은 공사들은 준공과

함께 소진되고 최저가제 공사등 수익성이 없는 공사들이 이를 대신하면서 업체별 공사실행률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올해부터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되는 등 주변환경이 더욱 나지고 있다”며 “앞으로는 원가관리능력이 수주경쟁력으로 직결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도권 개발 6000만평 서울쪽 집중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내 개발사업은 택지 4,500만평 등 모두 6,000만평으로 서울시 면적의 3분의 1에 이른다.

특히 이들 개발면적의 87%는 서울의 통영향권인 서울도심에서 40km내에 산재한다.

이곳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예상되는 수도권 내 신규개발지역 4,000만평이 빠져 있다.

그렇다면 수도권 내 개발계획이 동시다발로 착수됐을 때 인구집중과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가.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가동하는 시스템으로는 수도권의 난개발을 조정·통제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서울시시정개발연구원이 2006년 2월15일 마련한 ‘수도권의 효율적 성장관리체계 구축방안’을 위한 정책포럼은 수도권 난개발 예방과 바람직한 성장관리의 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정희운 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 대규모 신규개발사업의 실태와 계획적 관리방안 모색’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수도권 광역협의회

구성과 성장관리 시스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의 수도권 종합개발계획이 개별 사업단위별로 수립·추진될 소지를 안고 있어 수도권 전체 측면에서 이를 종합 검토하는 장치가 없다”며 “기존 수도권 광역행정협의회도 유명무실해 향후 수도권 성장관리의 부실확사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정부의 제 3차 수도권정비계획안은 권역별로 개발계획을 담았을 뿐 향후 다발소지가 높은 각종 개발사업을 적절하게 유도·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도권의 광역 성장관리를 도모하고 이를 실현시킬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도권 성장관리정책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협의체 기능을 대폭 강화해 택지개발 사전평가를 실시하고 중앙정부가 협의체에 행정·재정적인 제도기반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수도권 성장관리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립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성장관리법으로 대체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재개발·재건축 35만가구

오는 2015년까지 경기도 내 재개발과 재건축 주택건설 물량이 모두 35만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이노노 경기개발연구원이 수원과 고양시 등 도내 11개 시의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기본계획안을 토대호 17일 내놓은 ‘기성시까지 정비방향과 관리기준 수립연구’에 따른 것이다.

연구원은 11개 시의 정비사업 계획을 분석한 결과, 오는 2015까지 9만7,000가구의 주택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이들 지역에 모두 35만가구의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했다. 시별로는 안산시가 38곳(재건축 23, 유보구역 15)으로 가장 많고 이어 고양시 31곳(재

개발 24, 도시환경정비 7)부천·고양시 각 25곳, 수원시 21곳, 성남시 20곳 등이다.

경기도 내 기초 지자체는 오는 6월 말까지 이들 재개발과 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도의 승인을 거쳐 오는 6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연구원은 이들 11개 시에서 계획 중인 정비예정지구의 개발면적이 1,087만㎡에 이른 것으로 분석,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많은 양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은 이와 함께 오는 2010년 도내 노후주택 정비구역의 난개

발을 방지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정 가구수 밀도가 20~30/ha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또 시·군의 주거지역에 소규모 정비사업이 난개발이 되

지 않도록 조례화된 재건축 대상 건축물의 연한이 20년 이상 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리모델링 관리자격인증 추진

한국리모델링협회(회장 박준봉)는 리모델링사업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리모델링사업 관리자 자격인증을 추진키로 했다.

리모델링협회는 2006년 2월 10일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6년 사업계획안을 확정했다.

리모델링사업 수행에 따른 리스크와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모델링 단계의 원가, 품질, 안전, 정보, 계약구매,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관리분야와 엔지니어링분야등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리모델링 관리사의 자격인증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협회는 이를 위해 건교부 및 노동부에 교육기관으로 등록하고 공공부

문의 리모델링 용역 발주때 가산점을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준비 작업을 마친뒤 올 4분기부터 자격증 시험제도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올해에는 광주·전남·전북지역과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지회 설립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협회는 이날 총회에서 지회 설립 활성화를 위해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D등급회원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관 개정안과 수입 4억6,500만원, 지출 4억3,900만원 규모로 편성된 2006년 예산안을 원안 승인했다.

지난해 주택공급 46만가구

2005년 주택공급물량은 정부의 목표치인 50만가구보다 8% 부족한 46만가구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년 연속 정부 공급목표에 못미친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2005년의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전년의 실적치인 46만 3,800가구와 거의 비슷한 46만 3,641가구로 집계됐다고 2월2일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월별 공급량이 9월까지의 소폭 증가세를 보였으나 8.31부동산 종합대책의 영향으로 10월부터 감소세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은 공급물량이 전년(5만8,122가구)보다 10.9% 줄어든

5만1,979가구에 그치고 인천에서도 전년(2만5,740가구)에 그치는 등 전체 주택공급량의 40%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지방에서는 26만5,740가구가 공급되면서 전년 공급실적인 25만8,081가구보다 3.0% 늘었다.

지역별로는 부산(24.1%), 대구(64%), 광주(39%), 전북(39.6%), 경남(25.8%)등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부문별로는 공공부문이 14만978가구로 전년대비 13.7%가 늘어난 반면 민간부문은 주택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32만2,663가구로 5.0%가 줄어 대조를 보였다.

설계·감리 보증수수료율 인하

2006년 3월부터 설계·감리등 용역사업에 대한 각종 보증수수료율이 현행보다 최대 0.05%p까지 인하된다.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사장 황해근)은 2006년2월17일 "용역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과 서비스 강화를 위해 오는 3월1일부터 계약·하

자·선급금 등 3개 보증의 수수료율을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설계와 감리용역에 대한 계약이행 보증의 경우 연대보증이 있으면 현행 연0.21%에서 0.20%로 낮추고 연대보증이 없는 경우에는 0.50%에서 0.45%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하자보증과 선급금보증도 현행 각0.40%와 0.50%에서 0.35%와 0.45%로 각각 0.05%포인트 인하된다.

조합은 이에 따라 1억원 규모의 설계용역에 관한 보증수수료가 연

간 최대 1만원에서 5만원까지 절감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2월 23일로 예정된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수주 · 착공 · 허가...건설활동 부진

2005년 지난해 건설수주, 착공, 허가 등의 건설활동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대구, 인천 등의 주거용 건축이 크게 줄어 건축착공면적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2월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의 지방금융경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년도 건설동향에서 건축착공면적(3.0%)을 제외한 건설수주(-13.8%)와 건축허가면적(-5.8%)등 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수주의 경우 작년 3월까지의 증가세였으나 10월에 -29.3%로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하면서 4분기 감소세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지적됐다.

건축착공면적은 2005년 전체로 보면 전반적으로 부진했으나 11월에는 44.1% 급증, 3%대의 성장을 기록했다.

지역별 건축착공면적을 보면 서울, 대구, 인천 등의 주거용 건축활동은 부진을 면치 못했으나 경기,충북을 제외한 9개도의 주거용 건축착공면적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주거용(-47.1%),비주거용(-43.5%) 등 건축착공면적이 다른 도시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과 울산의 경우 주거용 건축착공이 각각 27.1%와 126.2% 크게 늘어났으나 2004년 4분기 실적이 예년평균의 30% 수준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사 제도 개선 '어느 세월에'

기술사와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이 2006년 3월말까지 마련되기 힘들 전망이다.

이는 기술사 우대방안으로 제시된 내용들이 기존 법률체계의 내용과 밀접하게 관련돼 업역을 둘러싼 갈등이 초래되는 등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 2월20일 과학기술부와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당초 지난해 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올 하반기에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이를 지키기 힘들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부와 건교부등이 함께 참여하는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거듭해 왔으나 아직까지도 많은부분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작년 말까지였던 제도개선 방안 마련시기를 이달 말까지로 연기했으나 여전히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상반기까지 기간을 늦춰도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것,

특히 기술사 단체에서 요구하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관련 내용의 경우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며 개선방안 마련작업에

진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사 단체는 건산업 개정을 통해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현장에 기술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건설업계는 부족한 기술사를 갑작스럽게 일정 규모이상 현장에 배치하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또 건기법상 감리자 배치문제와 관련해서도 수석감리사를 기술사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과 맞서있는 상태다.

건교부 관계자는 "건축사법과 건축법, 주택법,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걸쳐 기술사 우대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의하고는 있으나 업역과 관련되는 내용 등 복잡한 측면이 있어 쉽게 합의점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도개선 TF는 조만간 열리는 회의를 끝으로 과제를 국무총리실로 넘겨 후속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판교 신도시 '클린시티' 조성

오는 2009년 완공할 예정인 판교신도시에서는 쓰레기 수거차를 볼 수 없게 된다.

가정에서 투입구에 쓰레기를 버리면 지하에 설치된 관로를 통해 집하장으로 자동 이동·처리되는 시스템이 도입되기 때문이다.

한국토지공사는 판교신도시에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을 설치해 쓰레기차가 없는 '클린시티(Clean-City)'로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EKR 토공은 이 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발주해 오는 2006년 5월4일 입찰을 실시하고 설계심의 등을 거쳐 실시설계 적격사를 선정,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공사는 성남 판교지구 281만1,521평에 집하장 4곳, 투입구 482곳 이상을 이상을 착공후 30개월 안에 건설하는 것으로 913억

원의 공사비가 책정돼 있다.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은 가정에서 우체통처럼 생긴 투입구에 쓰레기를 버리면 진공 흡입기를 통해 관로를 따라 2~3km 떨어진 쓰레기 집하장으로 자동 이송되는 방식이다.

이는 차량에 의한 인력수거방식의 환경·위생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 됐으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2000년 용인 수지2지구에 이 시설이 도입됐다.

토공은 택지개발이 진행중인 김포 장기지구(26만평,190억원)에 이어 인천 청라지구(540만평, 1,700억원) 등 신고시에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건설경기 경착륙 현실화되나

작년 한해 동안의 건설공사 계약액이 99조3,840억원에 달해 전년 비 5.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월간집계로는 10월 계약액이 2004년 동기보다 37.8% 줄어든 데 이어 12월에도 16.9%가 감소한 14조7,407억원에 그쳐 건설업계가 건설경기 경착륙을 우려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건설공사수주동향에 따르면 작년 10월 전년 동월에 비해 37.8%나 줄었던 건설공사 계약액이 11월에는 0.3% 늘어 회복기미를 보였으나 12월에는 16.9%가 급감하면서 불안한 양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8.31대책으로 인해 민간부문의 계약이 감소하고 있는 데다

공공부문의 투자부진까지 겹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005년 12월 계약액을 발주 부문별로 보면 공공부문은 6조 3,353억원으로 전년비 18.0% 감소했으며 민간부문은 16.0%가 줄어든 8조 2,054억원에 그쳤다.

건협은 공공부문의 주거용 건축이 전년비 22.3%, 민간 주거용 건축이 1.4% 등 주거용에서 강세를 보인 반면 다른 모든 부문에서 심각한 부진을 보인 것이 12월 예약액 감소의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2005년 연간 누계실적은 99조 3,840억원으로 전년비 5.1% 증가했으나 2003년에 비해서는 3.0%로 감소했다.

혁신도시 土公·住公이 시행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의 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내정됐다.

토지공사는 6곳, 주택공사는 3곳의 혁신도시 건설을 주도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혁신도시 입지가 확정됐다며 지구지정 등 신속한 루속조치를 위해 시·도별 혁신도시 사업시행자를 내정했다고 2006년 2월 15일 밝혔다.

사업시행자로는 도시개발 전문기관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주 사

업시행자로 내정하고 시·도별로 6대 3의 비율로 맡겼다.

이에따라 토지공사는 대구시와 울산시, 광주광역시·전남, 강원, 전북, 경북 등 6개소를 시행하고 주택공사는 충북과 경남, 제주 등 3곳의 시행을 담당하게 된다.

토지공사의 도시건설 면적은 모두 1,359만 8,000평이며 주공이 맡는 면적은 399만 5,000평이다.

또 토지공사는 이전지역인 경북의 혁신도시 개발에 지분참여하도록

하고 지자체의 지방공사는 희망할 경우 공동참여를 허용하되 주사업 시행자와 협의를 거쳐 협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앞으로 사업시행자는 올 6월 혁신도시 지구지정 제안을 목표로 2월에 혁신도시 후보지 기초조사에 착수하고 상반기에 시·도지사 및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혁신도시별 개발 기본구상을 마련하게 된다.

건교부는 제정 중인 가칭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지원 특별법'이나 '도시개발법' '택지개발특진법' 등 혁신도시 개발에

적용될 새별사업법에 따라 지구지정때 정식으로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건교부는 상반기 내 혁신도시 지구지정 제안에 이어 9월에는 혁신도시 지구 및 사업시행자 지정, 2007년 5월 개발계획 승인, 2007년 말에는 공사발주와 착공에 들어가 2012년 도시건설 및 이전을 완료하기로 했다.

용역업계 양극화 해소해야

최근 국내 건설시장의 침체로 용역업계가 해외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이보다 앞서 고질적인 양극화 문제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용역업계는 전체 업체의 절반 이상이 매우 영세한 상태로, 규모만 작은 게 아니라 발전가능성이 희박한 업들이 난립해 있는다는 게 업계는 물론 외부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문제점과 마찬가지로 용역업계의 가장 큰 문제점도 양극화"라며 "개별업체는 물론 관련 기관과 단체, 또 정부가 나서 이를 조속히 해결하고 업계의 성장동력을 찾아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실 용역업계의 양극화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늘어난 업체들과 대형 SOC사업 등 건설프로젝트 부족으로 이미 3~4년 전부터 업계에서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됐다.

급기야 지난해에는 지역공동도급 문제를 놓고 수도권과 지방업체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바 있으며 올초 다소나마 잦아드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서울·수도권 대 지방으로 대변되는 대·중소업체의 갈등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건설시장의 계속된 위축과 용역시장의 개방 등 대내·외적 시장압력이 거세지면서 이같은 양극화는 자칫 업계의 근간을 뒤흔들 만큼 치명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용역업계에서도 몇년 전부터 계열사를 줄이고 영세한 업체들은 적극적으로 기업 M&A(인수·합병)를 시도하는 등 내부 정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개별적인 노력은 업계전체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 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제도적인 뒷받침도 되지 않고 있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우선 지방에 난립돼 있는 페이퍼컴퍼니를 정리하고 발전가능성이 없는 영세·부실업체들을 하루빨리 퇴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 용역사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는 주로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대형업체가 지역공동도급 등 수주를 위해 지방에 간판만 달아 놓으면서 양산되기 시작했다"며 "정부 차원의 실사를 통해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제대로 된 기술도 없이 학연, 지연 등 연고에 의한 비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수주, 존립하고 있는 지방의 부실업체도 하루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 같은 업계의 정화작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건설기술관리법'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등 현행 용역관련 법령 및 제도에는 부실업체 정리 및 페이퍼컴퍼니 제재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최대진 과장은 "부실업체와 페이퍼컴퍼니가 생겨나지 않도록 하려면 먼저 활동주체 신고 규정이 강화돼야 한다"며 "기술자 수에 국한된 신고규정에 실무경력을 포함시켜 더 이상 부실업체가 난립할 수 없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과장은 또 "자본과 규모 등은 부족하지만 기술력이 우수한 영세업체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페이퍼컴퍼니 및 부실업체는 과감히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관해 한국건설건설산업협회 전현구 처장은 "양극화는 물론 현재 건설기술용역업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건설기술에 관한 모든 제도와 정책 등이 건설산업과 따로따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라며 "건설기술의 발전 및 용역업계의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관성 있는 관리체계가 구축돼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